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민주당 심사 기초

윤석열정부, 역대 최악의 결산성적표

세수결손 · 지방재정 악화 · 예산 돌려막기 · 국가재정법 위반
수상한 정상외교 · 대통령실 이전 · 경호처 예비비 예산

- 국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의 2023년 재정운용을 한마디로 평가하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더해 실정법 위반까지 드러낸 역대 최악의 성적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 재정운용의 실패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민주당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정부의 재정운용상의 문제점을 낱알이 드러내고, 감사원 감사와 징계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등 책임을 엄정하게 추궁할 것입니다.

1. 2023회계연도 세수결손과 정부 대응의 문제점

- 2023회계연도 국세수입은 344.1조원입니다. 세입예산 400.5조원 대비 △56.4조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하였습니다. 윤석열정부의 부자감세와 경제정책 실패에 따른 것입니다.

* 국세수입 예산, 실적차 차이 : ('13) -8.5 ('14) -10.9 ('15) 2.2 ('16) 9.8 ('17) 14.3 ('18) 25.4 ('19) -1.3 ('20) 5.8 ('21) 29.8 ('22) -0.7 ('23) -56.4 조원

- 56.4조원에 이르는 세수결손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서도 심각한 문제점이 확인되었습니다.

○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른 부담을 지방정부와 교육청에 전가하였습니다.

- 정부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집행하지 않고 ‘불용’ 처리하였으며, 그 규모가 18.6조원에 이릅니다. 지난해 4분기가 돼서야 갑작스레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불용을 통보받은 지방정부와 교육청은 공약사업 등 재량사업을 중단해야 했으며, 아예 시작할 엄두도 내지 못한 사례도 부지기수였습니다. 아동수당 등 중앙정부가 위임한 필수사무만 간신히 수행할 수 있었다는 하소연이 나왔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지역의 주민과 학생들에게 전가되었습니다.

○ 정부는 예산 돌려막기(리볼빙)로 갚아야 할 빚을 뒤로 미뤄 향후 국민의 세 부담을 키웠습니다.

- 정부는 채무상환이나 국채이자 지급을 집행하지 않고 뒤로 미뤘습니다. 채무나 이자는 최종 정산할 때까지 가산이자 등이 붙기 때문에 향후 재정에 더 큰 부담이 되고 이는 국민의 세 부담으로 남습니다.
-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사업은 IMF 외환위기 당시 금융회사의 부실을 정리하기 위해 투입한 공적자금의 채무를 정부가 상환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도 이 사업예산은 2.16조원이었으나, 정부는 세수부족으로 0.3조원만 상환하고 1.86조원은 상환하지 않았습니다. 미상환 1.86조원에는 이자가 붙게 됩니다.
-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의 이자를 갚기 위해 일반회계에서 공자기금으로 예수이자를 상환하는 사업도 비슷합니다. 이 사업의 2023년도 예산은 14.5조원이었는데, 8.6조원을 상환하지 않았습니다. 예산 편성시 전제로 한 국채이자 금리와 실제 금리의 차이를 고려하면 7.8조원을 미상환한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것 역시 가산이자가 붙습니다. 그만큼 국민의 부담이 더 커집니다.

○ 세수결손에 무리하게 대응하다 보니 국가재정법을 위반하였습니다.

- 국가재정법 제18조와 제20조는 정부가 국세와 같은 세입을 재원으로 하되 국회가 의결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국채와 차입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예산총칙에서 국채와 차입금의 한도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 * 2023년도 정부예산총칙 제9조에 명시된 국채와 차입금 한도액 : ① 주택도시기금 19조원, ② 공공자금관리기금 169조원, ③ 외국환평형기금 27억 US\$
- 윤석열정부는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수입이 부족하자 예산총칙에 명시되어 있

지 않은 우체국보험적립금에서 2,500억원을 연 4.04% 이자로 차입하였습니다. 통상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부족한 수입을 확보하여 왔지만, 세수결손으로 그 여유가 없자 국가재정법을 위반하여 우체국보험 가입자들이 납부한 보험료 적립금에서 돈을 차입하였습니다.

- 윤석열정부의 부자감세와 정책실패로 발생한 세수결손이었습니다. 정부는 책임을 면해 보려고 민주당이 제안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거부한 채, 세수결손의 부담을 지방정부와 교육청, 국민에게 전가하였습니다. 예산 리볼빙으로 국민의 부담을 더 키워 놓았고, 국가재정법을 위반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민주당은 결산 심사과정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날날이 지적하고 책임을 묻는 한편으로 국가재정법 등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조치도 추진할 것입니다.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사용의 문제점

- 정부는 2023회계연도 예비비 예산 4.6조원 중 정부는 1.3조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예상하지 못한 긴급한 재정소요에 대비한 예비비를 사용원칙에 맞지 않게 씹짓돈 쓰듯이 사용했습니다. 본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해야 마땅한 사업에 예비비를 지출하여 국민과 국회를 기만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 정부는 대통령의 정상회의에 역대 최대 규모의 예비비를 편성해 사용했습니다. 부산 EXPO 유치 실패 등을 감안하면 본예산을 두 배 이상 초과한 정상회의 예비비 지출이 과연 적절했는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정부는 정상회의 참가 및 국빈 영접, 정상회의 개최, 해외순방 프레스센터 설치 등에 532억원의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 정상외교 관련 2023년 예비비 편성 사업 : (외교부) 정상회의 참가 및 국빈영접 328억원, (외교부) 정상회의개최 78억원, (문체부) 대통령 해외순방 프레스센터 설치운영 76억원, (대경처) 정상회의 경호활동 경비지원 50억원

- 특히 532억원 중 328억원을 정상 및 총리 외교에 사용했는데, 이 외교사업은 본예산에 248억원이 이미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본예산보다 두 배 더 많은

금액이 예비비로 지출된 것입니다. 그 중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아도 되는 특수활동비 역시 역대 최대 규모인 4억5,5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외교부-정상 및 총리외교 사업 본예산 및 예비비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합계(A+B)	23,420	21,555	19,608	25,993	24,890	21,191	22,502	26,780	57,727
본예산(A)	18,532	21,555	19,608	19,608	23,301	21,191	22,502	20,472	24,868
예비비(B)	4,888	-	-	6,385	1,589	-	-	6,308	32,859
(특수활동비)	(273)	-	-	(100)	-	-	-	-	(455)

□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예산도 예비비에 편성·집행하였는데, 대통령실 이전 완료 후 1년이 지난 시기에 예비비를 지출한 것은 대통령실 이전비용을 축소하려는 눈속임이 아닐 수 없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 이전에 소요되는 총경비는 496억원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2023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총괄명세서”에 따르면, 대통령경호처는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한 경호경비시스템 강화 사업 등 경호임무 수행을 위한 예비비 편성’을 내용으로 경호보안 시스템 강화에 86.7억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정부가 국민과 국회의 따가운 시선을 피하기 위해 대통령실 이전 비용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예비비로 충당하려 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경호처 경호보안 시스템 강화 2023년 예비비 내역〉

(단위 : 원)

구 분	지출결정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불용액 (A-B-C)	대통령 결재일	내 용
경호보 안 시스템 강화	8,666,000,000	2,444,217,880	5,485,031,000	736,751,120	2023-09-25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한 경호경비시스템 강화 사업 등 경호임무 수행을 위한 예비비 편성

○ 대통령경호처가 경호보안시스템 강화사업에 예비비를 집행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경호처는 86억원의 예비비를 편성하였으나, 정작 당해연도 지출은 24억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55억원을 2024년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연도별 집행

소요를 감안하거나 계속사업으로 분류해 본예산에 편성해야 할 사업을 예비비로 처리한 것입니다.

□ 특수활동비도 국회 심의 없이 예비비로 우회 증액하였습니다.

- 대통령경호처는 경호보안시스템 강화를 주요 사유로 86억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는데, 그 중 76억원은 경호장비시설 개선 공사비와 자산취득비로 배정하고 11억원은 요인 및 국빈 경호활동 사업의 특수활동비로 배정하였습니다.
- 요인 및 국빈 경호활동 사업은 대통령 및 국가요인 등 경호대상자에 대한 경호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호보안시스템 강화사업에 포함될 수 없는 예산입니다.
- 더욱이 대통령경호처 소관 본예산에 이미 특수활동비가 67억5,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민과 국회를 눈속임하여 특수활동비를 우회증액한 것입니다.

〈경호처 경호경비시스템 강화 관련 예비비 배정 내역〉

(단위 : 백만원)

내 용	예비비	배정내역			비고
		세부사업	세목	배정액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한 경호경비시스템 강화 사업 등 경호업무 수행을 위한 예비비 편성	8,666	경호장비시설개선	공사비 자산취득비	5,189 2,377	- 대통령 및 국가요인 등 경호대상자에 대한 경호수행 경비 지원 사업임 - 본예산에 특활비 6,755 백만원 반영, 예비비 1,100 백만원 배정으로 해당사업은 특활비는 7,855 백만원으로 증액 ⇒ 사업목적에 맞지 않는 예비비 배정이자, 국회심사를 우회한 특활비 증액
		요인 및 국빈경호활동	특수활동비	1,100	

- 예비비는 헌법에 따라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서 정부가 지출한 후 차년도 국회에서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결산심사 과정에서 국회와 국민을 기만하는 한편 부적절하게 집행한 예비비는 없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부적절한 예비비 집행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아울러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대책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추진
할 것입니다.

2024. 8. 16.

더불어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허영 예산결산정책조정위원장